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제 안 자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년 월 일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년 월 일
제안자 :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되었음.
- 그러나 법 제정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는 더욱 집중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 일부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본래의 취지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있음.

* 강화군, 용진군, 가평군, 연천군

-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164만 도민과 함께 수도권 초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대정부건의안 : 불임참조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수많은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적정하게 배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산업의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수도권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21년 12월 27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강화군, 용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현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붕괴와 국토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 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방법으로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 역사적 시도도 당장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164만 충북도민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분권, 자치,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